

수거 뿐인 미봉책, 또 판치는 불법 분양 현수막

미관·교통안전 저해...거래 교란에 행정비용 소모까지 '광고 효과에 과태료 감수' 풍조 만연...단속도 형식적 행정 처분 비율 매년 2% 미만...“실효적 과태료 부과”

광주 도심 곳곳에서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미관과 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 건설사 등이 분양 수익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태료에 아랑곳 없이 불법을 일삼지만, 당국은 철거에만 급급하다.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실효성을 높여, 불법 현수막을 둘러싼 잘못된 손익 계산을 바로잡아야만 근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23일 오후 광주 북구 신용동 신용고차로 곳곳에 아파트 분양 모집 현수막 20여 개가 내걸려 있었다. 현수막엔 '평당 900만 원대', '당신만 없는 브랜드 아파트 3억', '입주자

지 4000만 원' 등 참·거짓을 가리키기 힘든 문구가 가득했다. 인접한 광산구 산월동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는 마천까지였다. 한 보행자는 횡단보도에 낮게 걸린 현수막을 피해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때마침 불법광고물 정비단이 1t 트럭과 함께 움직이며 현수막을 떼냈다. 트럭 적재함에는 수거한 현수막이 가득 실려 있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심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 혼선을 야기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 일부 현수막 광고 중엔 '시행예정사' 등 모호한 표현을 쓴 허위·과장도 많아 거래 질서를 왜곡한다는 우려도 있다. 불법 현수막 수거·폐기에 따른 행정 비용도 소모적이다. 그럼에도 해마다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이 되풀이되는 까닭은 건설사·분양대행업체의 셈법이 한 몫 한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수막은 '확실한' 광고 효과가 있어 분양 수익 보장으로 이어진다"며 "제작비·과태료 등을 감안해도 아파트 몇 채 팔리면 훨씬 남는 장사다. 불법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풍조가 만연하다"고 전했다. 당국이 형식적 단속으로 일관, 방치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면엔 일일이 채증(사진 촬영)을 하기 어려운 여건과 법적 한계가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현수막을 표시 또는 설치한 자'다. 광고주(건설사)보다는 분양대행사 또는 하청업체, 아르바이트생 등이 과태료를 나눠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제반·결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당국은 부과 대상과 '줄다리기'를 하는 실정이다. 정부 표준안은 현수막 면적(㎡) 기준 1장 당 8만 원~80만 원 이상(10㎡ 초과 시 면적당 추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인당 최대 과태료는 500만 원이다. 실상은 납부 능력 등에 따라 하향 조정한다. 더욱이 과태료 규정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자진 납부 기간(2주) 중에 과태료 20%를 감경할 수 있다. 대행업체가 50% 감경 규정을 역이용, 장애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는 편법을 쓴 사례도 있었다. 광고주의 과태료 대납 '꼼수'가 판친다지만 뾰족한 수도 없다. 일선 공무원은 "수 백장씩 일시에 걸리는 불법 현수막을 액면 그대로 과태료 처분하기 어렵다"며 "그마저도 납부 능력 등을 감안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절충점을 찾게 된다"고 밝혔다.

다. 통계로도 단속 행정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전역에서 적발·정비된 불법 광고물은 174만103건이었다. 이 중 3만1814건(1.83%)만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이뤄졌다. 과태료 부과액은 약 37억 2105만 원이었다. 2019년에는 불법 현수막 111만 9101건이 적발, 2만2241건(약 27억 6636만 원)만 과태료 조치됐다. 2018년에도 151만9695건 중 3만203건(약 51억8983만 원) 만이 행정 처분을 받았다. 서선욱기자



23일 오후 광주 북구 신용동 신용고차로 주변에 걸려진 불법 현수막이 방치돼 있다.



스쿨존에 불법주차된 차량들 민식이법 시행 1년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 시행된 법안이다.

기아차 취업사기로 130억 챙긴 30대, 징역 15년

기아차 대표 명의 서류 위조...B목사가 모집해준 교인 등 대상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5일 광주지검 앞에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범인이 기아자동차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30대에겐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근로기준법 위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구직자 616명으로부터 취

업보증금 명목으로 135억 원을 가로챈 등 영리도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범행으로 구속된 B목사에게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서기관에게 뇌물로 줄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5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고용노동부의 기아차 지원금 심사가 통과되면 기아차에서 바로 채용자 발표를 할 예정인데 지원금 심사

가 지연되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아차 대표 명의의 서류를 위조, B목사가 모집해준 교인 등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가로챈 돈 대부분을 도박비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기간·횟수를 비롯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취업난 속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죄책이 매우 무겁다. 죄질에 따른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사기·사기 방조·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목사 등 3명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B목사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221명에게 취업 알선료를 부풀려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A씨를 통한 기아차 취업이 불가능한 것을 인지했는데도 피해자 374명을 추가로 모집해 A씨가 73억1500만원을 편취할 수 있게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정기자

캠핑장 이용권 사기 2000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코로나19 사태로 캠핑장 수요가 급증하자 관리자를 사칭해 캠핑장 이용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4일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유명 캠핑장의 관리자와 유사한 닉네임으로 인터넷 카페 및 캠핑장 사이트 등에 캠핑장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120여 명을 상대로 예약금을 챙기는 등 2000만원 상당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캠핑장 예약대기가 증가하면서 예약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과 비대면 예약 및 결제가 이뤄진다는 점 등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유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